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6-10-사무처-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허진선 070-5176-8168)

제 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26. 10. 2.(금)

전송매수 : 총 15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58개 개혁입법과제,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문대, 이하 민변)은 오늘(10/2) 국회 소통관에서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와 반드시 막아야 할 입법과제를 밝혔습니다.

3. 12.3 내란으로부터 두 해가 흘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지했으나 정치는 아직 그 광장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기틀을 세우는 일 또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민변은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위원회·센터·TF를 중심으로 총 58개의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모든 과제에는 실제로 발의된 법률안을 특정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거나 저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4.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권력기관 개혁의 남은 과제와 과거사 청산입니다.**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경찰, 정보기관 등의 개혁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경찰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시급합니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특례를 두고,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 **둘째, 인권의 기본 틀을 세우는 입법입니다.** 2007년 첫 법안이 발의된 뒤 스무 해 가까이 표류해 온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인인권기본법과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아동 구금 금지와 비구금적 대안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 **셋째, 아동·청소년과 여성, 소수자의 인권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안에는 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청소년 SNS 일괄금지,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개정에 반대합니다.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해 임신중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소송의 소송비용 특례 신설, 장애인·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 **넷째,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노동자를 포함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도 없애야 합니다. 돌봄권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를 개선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한 근로시간 제한 예외 확대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는 저지해야 합니다.

- **다섯째, AI 시대의 정보인권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명확한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폭넓은 표시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피지컬 AI 특별법안과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관련 6개 제정법률안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무분별하게 열어 주려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 **여섯째, 표현의 자유와 언론입니다.** 방송심의 규정에서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 알고리즘·기사배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촉구합니다. 선거국면에서 인터넷언론의 표현을 규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저지해야 합니다.

- **일곱째, 집회의 자유와 참정권입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7년 8월까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혐오표현·혐오집회 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 투표권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 사전투표제 폐지, 집회 시간·장소 금지 강화는 저지해야 합니다.

- **여덟째, 민생 과제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아홉째, 한반도평화와 남북교류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 **열째, 생명과 환경입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동물의 비물건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4. 민변은 국회에 이상의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입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민변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활동에 나서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 여는 발언 :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3. 소개의원 발언: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4. 국회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5. 국회의원 발언: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6. 민변 입법과제 소개: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7. 민변 입법과제 소개: 정명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8. 민변 입법과제 소개: 박현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붙임 1.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수록 입법과제 목록

붙임 2.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표지

붙임 3.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본문

붙임 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끝.

붙임 1.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수록 입법과제 목록(소관 상임위별, 중복 과제 포함)

상임위원회	정책목표	입법촉구/저지	법안명
법제사법위원회	고제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입법촉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	입법촉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	입법촉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촉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배제	입법촉구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입법촉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입법촉구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도입	입법촉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주택임대차법	입법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입법촉구	차별금지법안
	공항 구금환경 개선	입법촉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구금 제한	입법촉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거주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입법촉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입법촉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입법촉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촉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난민보호체계 강화	입법저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하향 저지	입법저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촉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	입법촉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원회	학생인권법 제정	입법촉구	학생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안

	교원 민형사 면책 개정 저지	입법저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심의 삭제	입법촉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입법촉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에 윤리원칙 신설 및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 추가	입법촉구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 부과	입법촉구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지컬 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반대	입법저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반대	입법저지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촉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SNS사용 일괄금지 저지	입법저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보장	입법촉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입법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결선투표제 도입	입법촉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선거권 보장	입법촉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입법촉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 저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 폐지 저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국면 인터넷언론 표현규제 강화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 실질화	입법촉구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피해자 배상	입법촉구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입법촉구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미신고집회 처벌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입법촉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 혐오집회의 금지	입법촉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시간적, 장소적 금지 강화의 저지, 집회시위의 전면적 금지 규정(시간, 장소	입법촉구, 입법저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입법촉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반대	입법저지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입법촉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입법촉구	노인인권기본법
	돌봄권을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입법촉구	돌봄기본법안, 돌봄정책기본법안,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위한 임신중지 관련 규정 개정	입법촉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소송 소송비용 특례 신설	입법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개정 저지	입법저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반대	입법저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입법촉구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추정원칙 도입	입법촉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업장 적용	입법촉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입법촉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사업자변경제한 철폐	입법촉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입법촉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권을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입법촉구	돌봄기본법안, 돌봄정책기본법안,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근로시간제한 예외 개정 반대	입법저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 반대	입법저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	입법촉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 위원회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입법촉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민변 입법과제 소개)

○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연심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두 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겨울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광장이 요구한 것은 권력자 한 사람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다시는 시민을 겨누지 못하게 함은 물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그 기틀은 결국 법으로 세워져야 하고 그 막중한 책임을 국회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발표하는 58개 과제는 구호가 아닙니다. 과제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을 특정하고, 통과시키거나 막아야 할 이유를 적었습니다.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심사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지를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데 그치지 않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조력하겠습니다. 입법감시 의견서를 들고 법안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1. 근로시간 제한(1주 40시간,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의 제정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인데, 근로시간 제한이 폐지될 경우 장시간/심야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산업재해 빈발이 예상됩니다.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이 1일 8시간 근로제를 명시한 이래 노동시간의 단축은 현대사회의 일관된 발전방향이자 정책목표입니다. 특정산업분야에서의 노동시간 규제완화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절차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후 시행령이 하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여 원청교섭이 가능하도록 입법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과 교섭단위분리를 인정해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져 노란봉투법 무용론이 팽배합니다. 급기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폐지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추정원칙 도입되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법안들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해당법안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가장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면서도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범위로 편입시켜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4. 이주노동자의 사업자변경제한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권리를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변경허용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사유 및 변경회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장변경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자 중심의 고용허가제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가 체류 및 정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정명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성과 소수자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를 함양하기 위한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인권 분야와 관련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네 가지 과제입니다.

- 1) 가정폭력 개념을 '친밀관계'까지 확대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기존법이 혼인·혈연 중심의 '가정구성원' 개념을 전제 하고 있어, 교제·동거·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 2) 돌봄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기본법 제정안입니다. 기존에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두었을 때 생겨나는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으로, 산재된 돌봄 법제를 아우르는 공통의 기본법 마련 역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3)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기조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공시제도만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업장별 고용·임금 정보의 공시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 정보 투명화를 위한 변화를 담았습니다.
- 4)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 건강권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관련 법제를 정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절 수술의 한계나 조건을 규정한 조항이 존치되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정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소수자인권 분야와 관련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세 가지 과제입니다.

- 1) 국가인권위, 유엔 등에서 수차례 권고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했던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입니다. 현재 차별시정을 위한 법이 개별법 형태로만 존재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이 구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합니다.
- 2)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비용 부담 특례를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데 있어 공익소송은 중요한 수단인 만큼, 그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접근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 3) 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투표보조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기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거나 가족 등 사적 조력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적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현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말씀드릴 민생분야 네 가지 개혁입법과제는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차권등기의 일반화'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된 임차권에 경매청구권까지 부여하여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은 '보호대상의 확대'입니다. 현재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금융채권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보호제도를 보다 폭넓은 개인채무자에게 확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책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의 재기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공정화'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자사우대, 과도한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 지연,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을 규율하여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집단소송법의 핵심은 '소액·다수 피해의 집단적 구제'입니다. 한 사람의 피해액은 작아 소송하기 어렵지만 전체 피해는 막대한 소비자 사건에서 대표당사자 등이 한 번의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개혁입법과제를 통해 임차인, 채무자, 소상공인, 소비자처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한단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